

[포토] “노동자·시민 6만의 목소리를 들어라”... 민주노총, 중재법 적용 유예 반대 집회

✎ 송승현 기자 | © 승인 2023.12.05 19:44

5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앞 집회 열어 국민의힘 지나 더불어민주당 앞 행진... 민주당, 6만 명 서명 수령 거부

지난 3일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50인(역)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사망자 80%에 해당하는 50인(역) 미만 중소기업노동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날세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집회를 마친 뒤 국민의힘 당사를 지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까지 이어지는 행진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반대하는 노동자·시민 6만 명의 목소리를 담은 서명을 책임있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를 통해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슬리퍼 차림으로 당사 앞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이를 거절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집회가 열린 이날부터 다음 국회 회기까지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을 촉구하고 대표자 단식농성에 돌입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집회에 함께했다. 사진=송승헌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집회 사회는 이태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이 맡았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손덕현 금속노조 부위원장.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선혁 민주노총 충북본부 본부장이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문화일꾼 류금신의 문화공연으로 결의를 다진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종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문화일꾼 류금신의 문화공연으로 결의를 다진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가 산재 피해 유족의 입장을 밝히는 발언을 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집회를 마치고 행진에 나선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표단이 행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집회를 마치고 행진에 나선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집회를 마치고 행진에 나선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행진 선동은 조진영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이 진행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집회를 마치고 행진에 나선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집회를 마치고 행진에 나선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집회를 마치고 행진에 나선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집회를 마치고 행진에 나선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집회를 마치고 행진에 나선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집회를 마치고 행진에 나선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집회를 마치고 행진에 나선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 노동자·시민 6만 명의 서명을 전달하고자 모인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반대하는 노동자·시민 6만 명의 서명을 책임있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 전달하려 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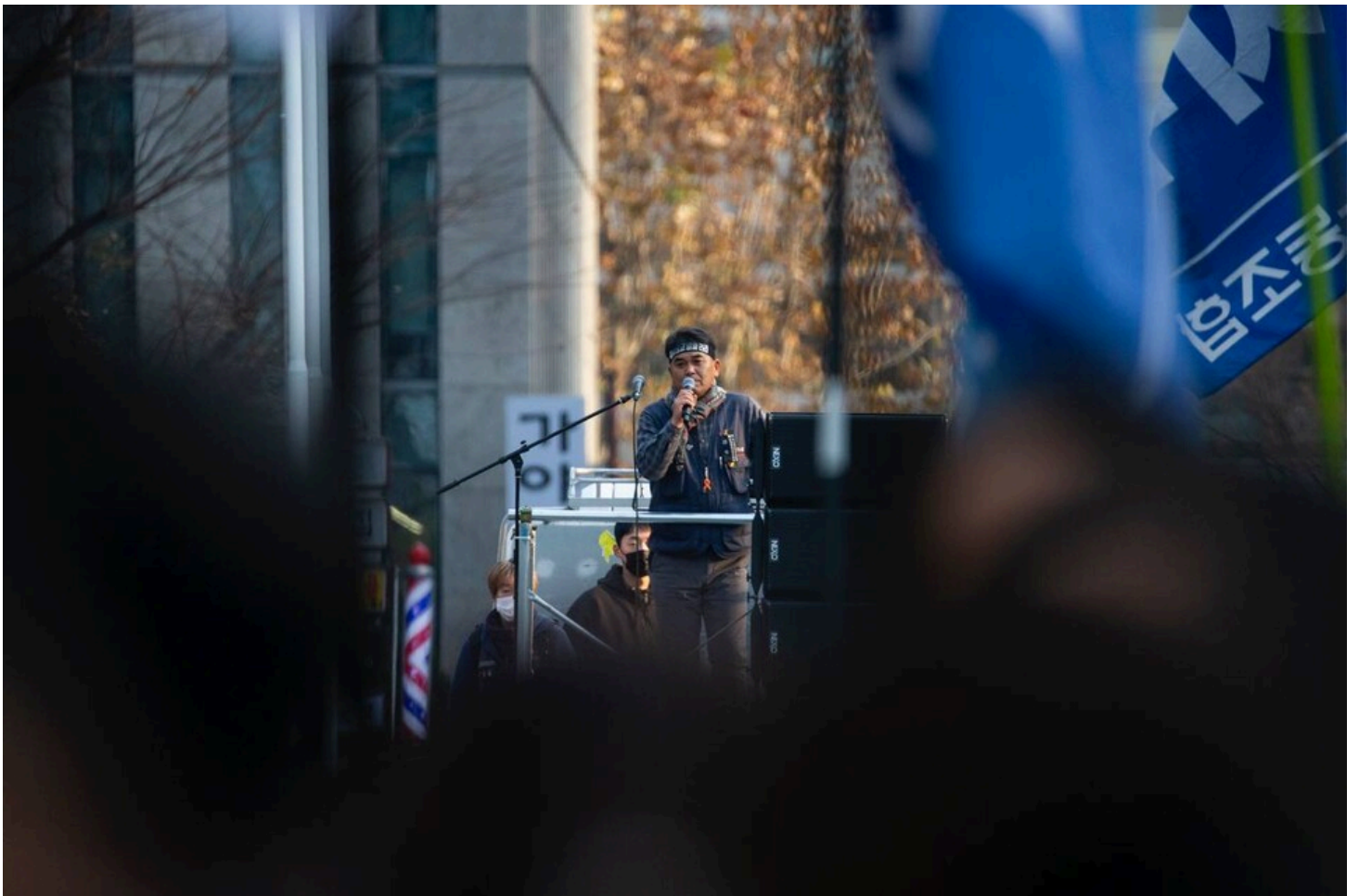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반대하는 노동자·시민 6만 명의 서명을 책임있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 전달하려 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슬리퍼 차림으로 노동자·시민의 서명을 받으러 나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반대하는 노동자·시민 6만 명의 서명을 책임있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 전달하려 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태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이 무례한 태도로 노동자·시민 6만 명의 서명을 받으려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을 지키는 경찰 앞에 놓인 노동자·시민 6만 명의 서명.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을 지키는 경찰 앞에 놓인 노동자·시민 6만 명의 서명.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을 지키는 경찰 앞에 놓인 노동자·시민 6만 명의 서명.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집회가 열린 이날부터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송승헌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옆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집회가 열린 이날부터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송승현



송승현 기자 now.worknworld@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